

민간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충남 지역산업 협의체 사례-

고경호¹, 김태연^{*}

¹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The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Intermediary Agencies in the Private Sector -The Case of Industrial Councils in Chungnam Province-

Kyung-Ho Ko¹, Tae-Yeon Kim^{*}

¹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민간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에 원활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도록 하는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민간분야 경제관련 단체 9곳을 선정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문지와 면담조사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직까지 과거 산업화시대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에 국한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신들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충남지역에서 지역산업체의 요구를 수용해서 새로운 협력적 활동을 주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종 지역 개발사업의 운영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산업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capacity building of intermediary agencies from the survey and analysis of intermediary agencies in the private sector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ungnam province. From the review of the literature, we defined the concept of intermediaries as an institute or program which builds and maintains the proper relationship among the various actors. In order to deter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intermediary agencies and their roles in Chungnam province, we selected nine private industrial institutes and carried out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 survey. It was identified that they have very limited knowledge of the role of intermediaries, while mainly focusing on the traditional function of lobbying groups. Therefore, a policy needs be developed to allow them to participate i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improve their capability to facilitate network activities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Keywords : Intermediary agency, regional network, regional governance, regional development.

1. 서론 : 문제 제기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대도시의 성장을 토대로 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Corresponding Author : Tae-Yeon Kim(Dankook Univ.)

Tel: +82-41-550-3614 email: tykim@dankook.ac.kr

Received March 3, 2016

Revised (1st April 5, 2016, 2nd April 25, 2016)

Accepted May 12, 2016

Published May 31, 2016

수도권 과밀현상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적 폐해와 경제성장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주의의 고착과 국민적 분열 등의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수도권 집중 및 지역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참여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지역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내생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이 정책은,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주도로 일률적으로 형성된 지역혁신체제와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당초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1-6].

1970년대 경제성장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에서 핵심적인 지역으로 부상했던 충남지역은 이러한 정책변화의 와중에서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과 대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지역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충남의 지리적인 조건은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정

책에 의존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경제발전 체계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충남지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적합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정책적 지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지역발전이론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개발 이론을 살펴보면[7], 지역의 전통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과 사업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연적 전문화론, 산업지구론, 사회적 자본론, 네트워크 이론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2000년대부터는 클러스터 이론이 다양하게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8].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획일적인 대기업 중심의 지역경제가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토대로 전통적으로 지역경제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소규모로 운영되는 이들 사업이 다른 지

역의 업체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서 범위의 경제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사회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업체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적인 경제체제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역할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이 연구는 우선 지역발전에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여 충남지역 지역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충남지역을 활동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 협의체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방문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중간지원조직의 논의배경과 개념

2.1 세계적 논의 배경

선진국에서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대전이후부터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던 세계경제가 1970년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급격히 쇠퇴하여 그 동안 정부에서 수행하던 각종 경제적,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대표되던 대기업 중심의 생산과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4].

이러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방식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정부 재정 악화에 따른 각종 정부 주도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민영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이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영역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사회적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민간분야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악화의 영향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지역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협력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루어졌고, 이후에 이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분야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다. 영국의 지역개발청 (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지역개발기관들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1980년대부터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논의가 증대된 것은 기존의 경제성장 체계 및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사회적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서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요구가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는 데에는 지방자치, 경제적 분권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네트워크화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15].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확실적인 정책과 서비스 제공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보이면서 새로운 민간영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상호 협력과 소통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정부의 파트너로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9].

2.2 우리나라의 논의 배경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가 주로 정부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중간지원조직이 보충하고 한편에서는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앙부처에서 정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 농림수산업부의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행정과

민간 간의 중재자, 민간과 민간 간의 협력 및 조정자, 부조한 민간역량의 보완 및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9, 11].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2011년에 고용노동부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였고, 15개의 지역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이 선정되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들도 별도로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 컨설팅 회사를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도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11].

이러한 정부 주도의 개념도입 추세와 유사하게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국내 연구 역시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정부부처가 실시하는 정책 사업의 범위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10].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는 정부주도적인 특성과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최근 몇몇 연구[9, 10]에서 사회적 기업 이외 분야의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다루고 있지만 아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고 특히,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분야의 협의체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제기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3 개념 정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배경과 우리나라 논의 배경 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 역시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경제, 사회, 복지, 행정, 연구개발, 지역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활동 중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16].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19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직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적인 배경에서 특정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기원을 16세기부터 18세기 영국에서 농업과 모직 및 섬유 산업에서 ‘중간업자(Middlemen)’로 활동하던 사람들을 기원[17, 18]으로 보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즉, 이들의 활동은 두 산업 간의 거래와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 모직생산, 섬유 생산을 둘러싼 다양한 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국내외 문헌을 살펴보면, Howells[17]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에이전트 또는 중개자로 활동하는 조직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켈로그재단[19]도 “최소한 두 부문을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12]에서는 ‘쌍방향 또는 다자적 관계 속에서 다른 조직들을 상호 연결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이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코디네이터, 에이전트 시 기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종합하면 “다양한 민·관 조직의 중간에 위치하여 인적, 물적, 기술적 지원, 정보와 자원의 네트워킹과 협력, 조정 활동을 통해 직간접으로 이들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9]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 중간지원조직이 정부와 민간단체, 민간단체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거버넌스적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명하는 가장 큰 개념적인 특징은 다양한 주체들 간에 또는 일정 주체와 그 대상(기술, 제도 등) 간의 원활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 (relational work) [16]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간지원조직을 단순히 단체나 조직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기능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을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주체들 간에 원활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관이나 단체 및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3. 충남지역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3.1. 조사 개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및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분기준이 제시되고 있다[7, 11, 13].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각각의 중간지원조직 유형에 관한 총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충남에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부문 중간지원조직을 사례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Table 1. Summary of survey

Categories	Main Contents
Survey Bod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ungnam Northern CCI*, - Seosan CCI, - Danjin CCI, - Chungnam Venture Association, - Korean Women Entrepreneurs Association Chungnam Branch, - Korean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 Association Daejeon · Sejong · Chungnam Branch, - Convergence Federation of SM Business Daejeon · Sejong · Chungnam Branch, - Chungnam Social Economy Network, - Korea Council of Social Enterprise Sejong · Chungnam Office.
Survey i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verview(Activities, Finance, HR etc.), - Internal Capacity, - Management methods, - Provision of Service, - Independent businesses, - Collabo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 Support received, Supports in needs, - hurdles against activity - Opinions for development of Intermediaries.

*CCI :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에서 순수 민간 주도로 설립하여 법인격 지위를 획득한 산업경제관련 단체 9곳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법인격 지위를 획득한 단체이나, 현재 설립 1년 미만으로 활동기반 조성기에 있거나 또는 조직 여건 상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주요 사업내용이 노사관계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전국 조합 및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를 회원 대상으로 한정된 단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2 일반현황

조사 대상 기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명칭, 설립연도, 법적형태, 주요사업, 모 기관의 지원 및 관여 정도, 재정현황, 인력현황 등 9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1 기관의 성격

이 연구에서 조사한 기관들은 모두 명목상으로 회원사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지역 및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업종별 단체가 아닌 전 산업분야를 망라하여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산업적 단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기관의 설립연도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1966년에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기관이며, 최근까지 충남지역의 상공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나머지는 모두 1990년대 이후 설립되었으며 사회적 경제 관련 협회 등 4개 기관이 2010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기관의 설립형태는 서로 차이가 있는데,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독립법인 형태 조직과 전국단위 조직의 지역지부형태 조직으로 나뉘어 있다. 이중에 지역지부형태로 대전·충남(세종)을 사업범위로 설정한 기관이 3개이며 나머지 6개 기관이 충남지역만을 사업지역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3.2.2 사업내용 및 재정현황

사례 기관들의 사업내용은 형식적으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관의 재정상황과 인력 등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의 양과 규모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사업내용을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으로 나누어 보면, 거의 모든 기관에서 자체사업에 비하여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사업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서비스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자체사업은 기관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 및 경영상담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사례 기관들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예산이 2억 원 이하인 곳이 3곳, 10억~20억 원이 5곳으로 나타났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9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정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대비 회비 수입의 비중 20%

미만이 4곳, 20~40%가 2곳, 40% 이상이 3곳이었으며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회비 비중은 34.3%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위탁사업비의 비중은 58.4%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중앙정부 지원비율이 42.9%, 지자체가 15.5%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중 자체수익과 기타 후원금 수입 등의 비중은 7%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사례 기관들의 재정면에서 특징을 정리해 보면, 먼저, 상공회의소가 다른 기관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큰데, 이것은 회원기업으로부터 회비(매출액의 1/1000)를 받고 있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연간 예산 10억 원 이상 기관들의 위탁사업비 비중은 전체 예산의 약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정규모가 2억 원 미만인 3개 기관은 모두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전체 재정의 70%를 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산대비 회비 비중이 클수록 위탁사업의 비중이 적고 예산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기관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체적인 사업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3.2.3 고용인력 및 회원기업 현황

조사 기관들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인력을 보면, 최소 1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35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3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 4곳, 5-10명 고용 기관이 3곳, 20명 이상이 2곳이었다. 5명 이상의 상시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들의 경우 연간 예산이 10억 원 이상이고, 예산대비 위탁사업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50-92% 사이인 단체들인데, 대부분의 고용 인력이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용된 인력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체 예산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1-2명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이 이들 기관들이 자체사업의 형태로 적극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각 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기업 현황을 보면, 회원기업이 100개 이하인 기관이 3곳, 100-300개 2곳, 300-500개 1곳, 500-1000개 1곳, 1000개 이상이 1곳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연간 매

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상공회의소들이 타 단체들에 비하여 회원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2.4 일반현황 분석결과 종합

조사 기관들의 일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기관들은 모든 업종을 망라하는 범 산업적 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 기반 주력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충남지역의 산업구조와 특성에 비춰 볼 때 기능별, 산업별로 특화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2000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8.4%(전국 1위), 2013년 현재 GRDP 전국 2위라는 성과를 달성한 충남지역 경제규모로 볼 때 지역 산업경제관련 단체들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단체들의 활동역량 등도 대체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충남지역의 경제성장이 수도권규제정책과 환황해에 접한 국토중심,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등의 영향에 힘입어 수출 중심형 대기업이 대거 입지함으로써 이루어진 외생적 발전의 결과에 안주했던 지역 혁신 주체들의 인식수준과 지역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충남지역의 경제발전 특징 상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산업경제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이 지역경제발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지역사회 혁신 주체들의 이해도와 인식이 고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 해당 기관들은 중앙정부 등 외부에서 하향식으로 주어지는 위탁사업의 수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순대행하는 활동에 조직 역량의 거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을 만큼 외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각 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따라 부여된 공통적인 주요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기업지원정보 제공과 경영상담, 각종 교육,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및 이를 활용한 기업지원기능의 활성화 등에 조직 내부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회원 기업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단체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특히, 해마다 주어지던 위탁사업이 축소되거나 일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칫 기관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넷째, 대부분의 기관들이 재정에서 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과 재정 대비 위탁사업 등 외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 자체 회비수입만으로는 최소한의 사무국 인력을 운용하지 못할 형편에 처해있는 기관들마저 존재한다는 점은 이들의 자립기반이 심각할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기관들의 연간 예산대비 회비수입 비율은 평균 34%이며, 이중 회비 수입이 20% 이하인 기관도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립기반이 취약하게 되면 외부 위탁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어 회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체 기획 사업을 수립,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는 기관들의 존업성과 자율성, 독립성, 자기 기획력, 지속가능성 등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지역혁신주체로서, 지역산업의 견인차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다섯째, 각 기관의 보유인력 중에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상시고용 인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관의 자체 고유사업의 기획,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은 이들 기관의 존재의미를 퇴색시켜 지역산업경제 영역의 핵심 혁신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면접조사 결과 분석

사례 기관들의 일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의 조직현황 및 활동실태, 애로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1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총 9개 문항을 제시하여 설문 및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및 면접조사는 크게 조직내부역량 평가, 역할수행방법,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 자체 사업의 종류, 관계 기관별 교류현황, 외부기관의 지원현황, 운영상의 애로사항, 요구되는 외부지원 사항, 단체 활성화 방안 등 총 9개 문항으로 실시되었는데, 서술형을 제외한 문항들은 각 문항에 따라 빈도별(1-7)로 각각 점수를 부여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별 결과는 각 해당단체가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후 이를 평균점수로 산출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면접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3.3.1 조직 내부역량 자가 평가

조직 내부역량 자가 평가 결과는 평균 5점 이상으로,

‘대체로 강함’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평균점수를 보면, ‘중간조직의 인사·재정·사업 등 운영의 자율성 정도’(5.89), 조직의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 정립(5.67), 조직 구조의 합리성 등(각종 규정, 의사결정구조, 조직 내 업무 분장)(5.56), 전담인력의 해당 역할에 대한 공감대/ 자기 전망과의 밀접성(5.44), 다양한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네트워킹 / 파트너십)(5.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종사자의 해당 역할 수행과 관련한 직·간접 경력 및 전문성 정도, 사업 기술능력(사업 목표 수립 및 실행, 재정 전략 및 재무 관리), 조직의 물적 인프라(사무 공간, 시설, 기기 등), 조직 문화(조직원 권한 위임, 조직원동기부여 등)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3.2 역할 수행 방법 평가

각 기관들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 사례 기관 9곳 중 7곳은 ‘자체 역량 중심이면서 일부 외부 의뢰’(77.8%)를 통하여 단체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모두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타 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각각 1곳씩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외부 역량에 의뢰하여 제공’하거나 ‘외부 역량 중심이며 일부 자체역량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관은 없었다.

3.3.3 제공 서비스 평가

각 기관이 회원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자가 평가결과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 ‘보통’ 또는 ‘대체로 많음’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종 시설 및 장비 증개, 기술 증개, 해외시장 판로개척 홍보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선 ‘적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문항별로 살펴보면, 정보수집 및 알선(6.11), 회원사 종사자 교육·훈련 등(5.89), 관련 행사 기획 및 진행(5.72), 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촉진(5.22), 경영에 전문적 자문 및 컨설팅 제공(5.11)순으로 ‘대체로 많음’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정책 참여(5.0), 회원사의 일상적 운영 관련 자문(4.89), 일자리 알선(4.78) 등을 ‘보통’의 수준으로, 각종 시설 및 장비 증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홍보, 기술 증개기능은 ‘적음’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3.4 자체 사업 가능 분야 평가

중간지원조직에서 제공할 수 있는 14가지 서비스 중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각 기관들의 자가 평가를 보면, 관련 행사기획 및 진행(15.2%), 회원사 종사자 교육 및 훈련지원(15.2%), 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교류촉진(13%), 정보수집 및 제공(13%)순으로 빈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 일자리 알선(8.7%), 회원사 인증 지원 상담(8.7%), 회원사 운영관련 자문 활동(6.5%), 조사 연구 및 정책·제도 개선 건의(6.5%), 경영에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 제공(4.3%), 회원사 및 기관·단체 간의 협력 조정(2.2%)순으로 답변하였다. 반면, 각종 시설 및 장비 증개, 해외시장 판로 지원 및 홍보, 기술 증개 기능 등 3개 항목에 대해선 자체사업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3.3.5 기관별 교류 현황 평가

현재 교류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관계 기관별 교류 현황 및 빈도에 대한 평가에서 해당 기관들은 9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는 ‘보통’수준으로, 3개 항목은 ‘적음’수준으로, 4개 항목은 ‘대체로 많음’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는 관련 공공기관(5.44),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자치단체(5.33), 관련 단체(5.33)순으로 ‘대체로 많음’수준으로, 그 다음으로 대학 및 연구소(4.56), 민간기업(4.44), 비영리단체(4.11)가 ‘보통’수준으로, 컨설팅 관련 전문기관(3.78), 중앙부처(3.56), 지방의회(3.44)는 ‘적음’수준으로 평가하였다.

3.3.6 외부 기관의 지원 현황 평가

외부기관의 지원현황과 만족도와 관련하여 각 기관들의 평가 결과는 7곳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행자부, 보건복지부, 충남도, 기초지자체 등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위탁사업을 유치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기관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평가되고 있으나 거의 모든 위탁사업에 대하여 ‘보통’ 또는 ‘대체로 만족’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관의 지원현황을 보면, 조사 대상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대체로 2건에서 많게는 7건에 이르는 위탁사업을 수행 중이며 위탁사업을 단 한건도 수행하지 않는 기관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대전·세종·충남연합회와 여성경제인협회충남지회, 서산상공회의소 등 3

개 단체이다. 다양한 위탁사업 중에 4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청년취업인턴제와 시니어 인턴제 사업의 경우 ‘만족’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사업 제공 기관·단체를 중앙정부(중앙단위 공공기관포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타단체로 나누어 사업의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조사 기관들은 중앙정부(5.16)와 기초자치단체(5.16)가 위탁한 사업의 만족도에서 ‘대체적으로 높음’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광역자치단체(4.00)가 위탁한 사업이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3.7 운영상의 애로 사항

조사 대상 기관들이 겪고 있는 운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이들 기관들은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발전을 위한 사업비(위탁사업비 외) 부족을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충분하게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등 경성비가 부족하여 전담인력의 업무량 과다, 낮은 처우에 따른 이직률 상승, 전문성을 보유한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부 기관은 자체사업비 및 건물 공간 등 고정자산이 부족하여 위탁사업 추진 시 매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의 기획력과 창의성, 자율성 등을 보장, 사업 수행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방식을 단위사업 중심의 사업별 공모방식에서 포괄적 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섯째,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보유 인력들의 정채조망능력, 행정능력 등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3.3.8 면접조사 분석 결과 종합

조사 기관들의 현장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나타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의 전문성이나 사업 기술능력, 조직원 동기부여 등 조직문화, 조직의 물적 인프라 등은 개선·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는 각 기관의 현재 재정자립 상태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서, 재정자립기반 개선을 위한 해당 단체들의 혁신적인 전략과 계획이 요구된다.

둘째, 각 기관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하여 보면, 오로지 자체 역량으로만 또는 자체 역량 중심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도 일부 존재하지만, 이보다는 사업의 성격이나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사업들이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이 이에 대한 마인드 및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각 기관의 재정 및 인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 및 역량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해당 기관들의 현실 역량, 그리고 지원서비스의 특성상 극히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의 경우 자체 역량만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나타났다. 설사 자체 역량만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수행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해당 기관들의 역할이 다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 빈도가 대체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조사 기관뿐만 아니라, 산·학·연·관 등 지역사회 내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에 대한 마인드와 의지가 부족하고 연대협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련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교류빈도가 낮다는 것은 이들 기관들이 획일적인 하향식 위탁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수준의 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해당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취약한 재정자립 기반은 단체의 존립과 안정적 운영 자체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 기관에 단체의 존속과 운영을 위한 재정적, 물적 지원과 위탁사업을 요구하기에 앞서 적극적인 회원확대와 낮은 회비 징수율 제고, 자체 수익모델 개발 등을 통하여 회원 기반이 두터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할 모색과 함께 재정기반 혁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4.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4.1 정책추진 방향

충남지역 산업경제 분야 민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 연구는 충남지역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대기업 중심적인 경제 체계에서 지역 기업들 간의 순환적인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지역에서 산·학·관 협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들 세 분야의 기관들을 서로 연계해주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데, 이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경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여 충남지역경제의 혁신을 매개하는 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정책적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단계는 중간지원조직의 양적성장단계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즉, 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 및 컨설팅, 지역적 근거리 유통관련 사업, 지역 사업체 간 협력 사업 등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별 단체의 협의체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컨설팅 업체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차원에서 활동하려는 많은 조직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의욕을 가진 전문가들이 일정한 지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 관련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증진단계로서 각종 기업체 지원 사업의 추진과정에 중간지원조직들이 사업의 준비, 시행,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지식과 지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지역 내외에서 분야별로 특정 아이디어나 기술의 개발자 및 요구자들을 파악하고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3단계는 통합단계로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개발추진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별로 지역발전 주도 기관을 설립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중간지원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특정한 요구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2 정책추진 과제

충남의 민간분야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역 산업경제의

전반적인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활동 범위를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첫째, 민간분야 중간지원조직의 능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외부 위탁사업의 운영에 치중함으로써 자기 회원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 중간지원조직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사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간지원조직들이 회원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많은 회원사들이 이들 조직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중간지원조직의 직원들이 산·학·관 협력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사들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이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시행착오를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상명하달적인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정책시행체계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나름대로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충남도청이나 시·군청 차원에서라도 자신들의 권한으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기업 간 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그 시행 권한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산업사회의 구시대적인 행정절차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업 간의 혁신적인 지식과 기술교류가 장애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나타나는데, 첫째, 정부주도 사업의 민간이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이다. 즉, 기존의 정

책시행체계에서 새롭게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기업들이 공동협력사업을 수시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기업들이 스스로 이런 협력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들이 각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여 이들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는 공동협력사업에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예산 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는 충남지역의 다양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이를 공동협력사업으로 정책화시키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좀 더 많이 형성되어야 한다. 많은 선진국의 사례 연구들은, 지역 기업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 내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도 그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지역적인 네트워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양적으로 많은 수의 중간지원조직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지역 기업들의 혁신적인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고, 이것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혁신과 주체 간 협력은 강조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단지,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기능에 한정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활동으로만 한정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민간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산업분야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들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충남지역의 9개 민간 협의체에 대한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적 이해도 낮고, 그 기능과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자신들의 역할이 회원사들의 법적, 제도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원 기업들의 지식 교류와 협력 및 혁신을 추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자기 정체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제적, 기술적인 문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협회는 단지 법적, 제도적인 애로점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기능만 수행하면 된다는 구시대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또 다른 원인은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단지 이들 협의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구시대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기업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외국 사례를 견학하고 많은 국내 연구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민간분야 중간지원조직의 문제는 단지 민간 협의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분야 중간지원조직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단지 기업만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대기업이 경제성장의 주도세력이 되는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다. 이제는 중소기업의 협력적 기술이 대기업의 독자적인 개발 기술을 능가하는 시대이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충남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제는 기업과 정부가 중심이 아니라 기업 간 협력,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매개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References

- [1] H. J. Cho, "Regional Governance and Social Corporatism Model", in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the Society and Economy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eninsula Economics : Searching for New Development Models*, p. 380-400, Changbi Publishers, 2007.
- [2] H. B. Im, "The Process and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Korea, 1972-2012",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Vol.26, No.3, p.315-339, 2013.

- [3]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New Policy Strategies of Regional Development for the National Happiness and Regional Consolidation : Sectoral Policy Agenda,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2013.
- [4] D. C. Sin, New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aradigm of the 21st Century,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Foundation, 2008.
- [5]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Searching for New Approach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Refelcting Recent Paradigm Chang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2009.
- [6] T. Y. Kim, "Has the Paradigm of the Korean Rural Development Policy been Changing : The Application of Neo-endogenous Development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 Vol.93, No.1, p.86-131, 2015.
- [7] Y. W. Kim, M. S. Cha, and H. S. Kang, Regional Development Policy, Hanweul Academy, 2014.
- [8] M. Porter, (K. M. Kim and Y. S. Kim, translated in Korean) On Competition, 21C Books, 2011.
- [9] J. G. Ko and J. H. Ju, A Study on Strengthening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r Low-Carbon Green Communities in Gyeonggi-Do,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12.
- [10] J. G. Ko, and J. H. Ju, "A Study on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r Building Energy Independent Community in Europe", Environmental policy, Vol.22 No.2, p.101-135, 2014.
- [11] D. B. Song, "The Role and Challenges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r Social Economy in Chungnam Province", The Chungnam review, No.56, p.31-39, 2011.
- [12] Community Business Center, Manuel for Intermediary Bodies for Community Busines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011.
- [13] S. J. Ma, How to Activate Intermediary Bodies for Rural Social Enterprise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1.
- [14] T. Mittilä, "Intermediary Organisation in a Regional Development Network", Conference on Reg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Processes, March 5th-7th, 2008, Porvoo - Borgå, Finland, 2008.
- [15] M. J. Blank, S. Deich, R. Kazis, B. Bolitz, and S. Trippe, "Local Intermediary Organizations: Connecting the Dots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Partners for the Intermediaries Report, pp.1-8, 2003.
- [16] T. Moss, "Intermediaries and the governance of sociotechnical networks in transi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41, pp.1480-1495, 2009.
DOI: <http://dx.doi.org/10.1068/a4116>
- [17] J. Howells, "Intermediation and the Role of Intermediaries in Innovation", Research Policy, vol.35, pp. 715-728, 2006.
DOI: <http://dx.doi.org/10.1016/j.respol.2006.03.005>
- [18] I. Laur, M. Klofsten and D. Bienkowska, Catching regional development dreams: a study of cluster initiatives as intermediaries", European Planning Studies,

(20), 11, 1909-1921, 2012.

DOI: <http://dx.doi.org/10.1080/09654313.2012.725161>

- [19] Kellogg Foundation, Building Community Capacity: an Initial Inventory of Local Intermediary Organizations,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2002.

고 경 호(Kyung-Ho Ko)

[정회원]



- 2013년 8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 2012년 10월 ~ 2014년 12월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원장
- 2015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지역산업경제, 지역개발, 사회적경제육성 정책 등

김 태 연(Tae-Yeon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고려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 2004년 5월 : 영국 뉴캐슬 대학교 경제학박사
- 2003년 12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2005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개발정책, 농업환경정책, EU 및 영국의 농촌정책